

고용노동부 원주시청, 원주·횡성 중대재해 감축 위해 민관 공동 대응 나선다

- 고용노동부 원주시청, 민관 합동 포럼 및 공동 결의대회 개최
- 노동부, 안전공단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19개 기관 한 자리에
- 4대 기인물 집중관리로 2026년 중대재해 50% 감축 목표

고용노동부 원주시청(지청장 김진하)은 4월 13일(월) 14시, 원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재해예방기관 공동 포럼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원주·횡성 지역 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이 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19개 기관 관계자 약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최근 원주·횡성 중대재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붕작업, 지게차, 화물자동차, 사다리 등 ‘4대 기인물’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원주시청은 사고 다발 기인물에 대한 집중관리와 현장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4대 기인물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 ▲안전보건공단 재정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위험격차 해소 방안 등을 공유하였고, 참석자 간 자유 토론을 통해 다양한 협업 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축사 및 태양광 설비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지붕작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기술지도와 재정지원 연계, 패트롤 점검 강화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기관이 함께하는 공동 결의문 낭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과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짐하였다.

김진하 지청장은 “중대재해는 반복되는 위험요인에서 발생하는 만큼, 기인물 중심의 집중관리와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관리 체계가 촘촘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조대인 (033-769-0820)
		담당자	근로감독관	박환주 (033-769-0821)



별첨
(추후 배포)